

“매립장에 수소도시”...동구 420억 프로젝트 착수

복토공사 시작...에너지 생산·저장·활용 ‘자립형 도시’ 탄소저감·체험형 인프라 결합...2030년 미래도시 모델

광주 동구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장기간 방치됐던 매립장을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역 내 자립형 에너지 생태계가 구축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소태동 위생매립장 일원 7만2035㎡ 부지(매립 용량 105만6905㎥)에 총사업비 420억원(국비 210억원·시비 126억원·구비 8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된다.

가스 포집 설비와 배수시설 등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향후 수소 생산과 에너지 인프라 조성을 위한 필수 기반 작업이다. 동구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매립장은 2000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운영된 뒤 사용이 종료됐지만, 국토교통부와의 복토공사 비용에 대한 논의로 착공 시점이 늦어지면서 최종 복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장기간 유휴부지로 남아 있었다.

동구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수소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한 후 매립장 사용종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마스터플랜 수립을 거쳤고, 이 공간을 수소 기반 친환경 도시로 전환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광주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 부지(소태동 166 일원) 전경. 사진제공=광주 동구청

핵심은 ‘에너지 생산-저장-활용’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자립형 구조다.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전해 시스템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해 수소를 만들어 다양한 모빌리티와

시설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생산된 수소는 수소버스와 승용차, 자전거, 드론 등 교통수단은 물론 충전 인프라를 통해 도심 곳곳에 활용될 예정이다. 관용차 전용 수소충전소도 함께 구축된다.

단순한 에너지 시설을 넘어 시민 체험형 공간도 조성된다.

‘수소 테마파크(H파크)’에는 통합안전 운영센터와 수소에너지 홍보 LAB(수소 캠퍼장, 수소테라피 등) 등 홍보·체험 공간이 들어선다.

통합안전운영센터에는 수소 생산, 배관, 충전소, 연료전지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점담인력을 배치해 사고 방지와 연료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민에게 수소에너지의 안전성과 차별성을 홍보하기 위해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생활체험형 복합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동구는 이번 사업이 도심 내 탄소배출 저감과 함께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생산과 소비, 관리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다만 수소 생산·저장 과정의 안전성 확보와 경제성 검증 등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수소 인프라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수용성 문제와 유지관리 비용 등 사업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동구 관계자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친환경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도심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수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도시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하나로 울산, 전남 광양 등 전국 15개 시·군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 동구는 이 가운데 생활밀착형 수소 인프라 구축을 전면에 내세운 사례로 평가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6:00	달림	04:57
맑음	19:06	달림	17:50



광주	10-26
목포	10-23
여수	11-21
순천	10-24
구례	8-25
광주	9-22
신도	11-20
흑산도	11-16
진남	10-22
진도	12-28

목포	밀물(고)	01:05 / 13:23
	썰물(저)	06:31 / 18:50
여수	밀물(고)	08:23 / 20:42
	썰물(저)	02:01 / 14:22

여수 영아 학대사건 1심 앞두고 시민 추모 확산 전국 부모들 자발적 집회...추모·퍼포먼스 등 예고

오는 23일 여수 영아 학대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시민 추모 집회가 열린다.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로, 전국 각지에서 부모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광주 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범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생후 4개월 만에 숨진 영아 ‘해든이’를 기억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현장에 모인다.

집회는 별도의 조직이나 단체 주도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가 이어졌다. 특히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중심이 돼 추모와 문제 제기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결심공판이 이뤄진 지난달 26일에도 별도의 주체 없이 부모들을 중심으로

현장 추모가 이뤄졌다.

행사 당일 현장에는 희생 아동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마련된다. 참가자들은 화환과 리본, 풍선 등을 준비해 상징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메시지를 통해 애도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피켓과 현수막에는 아동학대 근절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다.

단순한 추모에 그치지 않고 참여형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약 5년간 이어지는 퍼포먼스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집회 측은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제도적 보완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 전반에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집회 관계자는 “추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장애 인식 개선 OX퀴즈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5일 오후 광주 동구청 로비에 마련된 체험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동구장애인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장애 인식 개선 OX퀴즈를 풀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 공보의 411명 배치에도 인력 감소 지속

의과 51명 줄어...순회진료·시니어 의사로 공백 대응

전남도가 의료취약지 1차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배치했지만, 인력 감소 흐름이 이어지면서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15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를 411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치는 신규 공보의 173명을 포함한 규모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취약지 병원 응급실, 병원선 등 274개소에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의과 128명, 치과 108명, 한의과 175명이다. 공보의들은 보건소·보건지소 238개소를 중심으로 지방의료원 3개소, 응급실 17개소, 병원선 2척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다만 올해 배치 인원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65명 줄었다. 특히 의과 공보의가 51명 감소하면서 1차 의료 대응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전남도는 공보의 감소 원인으로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차이, 여성 의사생 비율 증가, 의대생 군 휴학 확대 등 의료계 환경 변화를 꼽았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공보의 우선 배치 기준을 의료가 없는 도서·벽지로 조정하고, 일부 보건지소는 기능 개편을 통해 진료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65곳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기본 진료를 유지하고, 한의과·치과 진료는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순회진료도 확대한다. 139개 보건지소에는 보건소 공보의를 활용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 12개소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해 예방 중심 서비스에 집중한다.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전남도는 총 17억원을 투입해 전문의 24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주거·연수·연구비를 지원해 장기 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산 교육을 실시해 원격 협진체계를 확대하고, 시니어 의사 등 관리의사 채용도 지역 의사회와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회생법원-캠코 “회생기업 정상화 지원”

자산매각 효율·공정 강화

광주회생법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회생기업들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전남 캠코와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 지원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약’, ‘파산재단 자산의 효율적 환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상화 가능성은 있지만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서남권 소재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은 관할 지역 내 지원 대상 회생기업을 캠코에 추천, 캠코가 지원하는 기업의 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한다.

캠코는 추천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자금대여, 지급보증, 전문기관선택, 자산매각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의



광주회생법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4일 회생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회생법원

빠른 경영정상화를 도울 계획이다.

향후 회생·파산절차의 신속한 종결과 채무자가 조속히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회생기업과 파산법인 등의 자산매각 절차에 ‘온비드’를 연계한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회생기업·파산법인 등의 자산매각 효율성·공정성을 높이고 서남권 회생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더 많은 기업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5곳서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운영

도시미관 훼손...지정 구간 모든 게시물 설치 제한

광주지역 5곳에 ‘현수막 없는 거리’가 시범 운영된다.

구간은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 서구 광주공인마루 주변, 남구 광주국제양공주 주변, 북구 용봉계 주변, 광산구 광주송정역 주변 등으로, 이 곳에서는 공공·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이는 최근 교차로와 밀집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에서 현수막으로 인한 시야 방해와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정 구간을 지정해 상시 관리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광주시는 불법 및 정당 현수막 난립 등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보행·교통 안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 오는

2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 곳에서는 공공·정당·상업용을 불문하고 광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정구간 내 불법 광고물 발견 때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다.

특히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을 우선 투입해 주말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정기 순찰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며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에 기재된 연락처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에 등록해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헤어진 연인 스토킹·보복

헤어진 연인의 가족들에게 자신과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금지 통보를 받고도 수 백회 가량 연락한 남성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승현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또 4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

A씨는 지난 1월4일 광주광산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자택 인근에서 ‘자신과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

A씨는 이튿날 같은 장소에서 만난 B씨를 주먹으로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고, 이후 6월부터 15일까지 총 189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소방관 순직, 근본 대책 마련” 민주노동당 광주본부, 개선 촉구

전남 완도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2명이 순직한 사건을 두고 광주 노동계가 형식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광주본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수년간 소방공무원이 희생될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엔 바뀌지 않았다”며 “현장 진입 판단과 지휘 체계, 대응 과정 전반을 검토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장비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소방인력 확충과 노후장비 교체, 첨단장비 보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료 소방관의 심리 안정 지원과 전문적인 치료 보장도 당부했다.

단체는 “장기적인 추척 관리와 치료가 가능한 공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